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9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1.

발 의 자 : 황운하 · 조 국 · 김준형
이해민 · 김재원 · 강경숙
김선민 · 신장식 · 정춘생
서왕진 · 박은정 · 차규근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(이하 “대부업자등”이라 함)의 대표자,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(이하 “임원등”이라 함)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법, 「형법」,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‘벌금형’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.

그런데,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벌금형과 달리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‘금고 이상의 형’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는 문제가 제기됨.

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

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제4호).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 중 “유예기간 중에 있는”을 “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,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임원 등의 자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·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,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. 다만,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	제4조(임원 등의 자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<u>유예기간</u> <u>중</u> <u>에 있는 자</u>	4. ----- ----- <u>유예기간이 끝</u> <u>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</u> <u>한</u> ---
5. ~ 7. (생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